

그렇지만 시간당 임금은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40대(16,669원)를 정점으로 낮아지며, 비정규직은 30대(9,653원)를 정점으로 낮아지고 있다.

<표 II-59>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원, %)

구 분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19세이하	5,029	6,625	4,803 (72.5)
20~29세	9,450	10,414	6,989 (67.1)
30~39세	14,099	14,921	9,653 (64.7)
40~49세	15,044	16,669	9,199 (55.2)
50~59세	13,666	15,644	8,769 (56.1)
60세이상	9,165	10,940	7,177 (65.6)
전 체	12,878	14,388	8,236 (57.2)

주: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근로자기준(1인가구 제외) 노인빈곤율(65세 이상)은 1989년 11.0%에서 2009년 27.2%로 늘어났다. 지난 20년 동안 두 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특히 1995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이 급증한 상태에서, 사회보장제도 도입이 빈곤층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60> 노인빈곤율¹⁾

(%)

구분	1989	1995	1997	2000	2003	2005	2009
노인빈곤율	11.0	13.2	16.6	19.8	23.4	21.3	27.2

주: 1) 도시근로자기준 1인가구 제외,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인구비중
 자료: 보건복지백서

OECD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5.1%⁵²⁾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전체 30개 국가 평균 13.5%에 비해 약 4배가 넘는 수준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남정보다는 여성, 부부보다는 독신의 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61> OECD 노인빈곤율(2000년대 중반)¹⁾

구분	전체 (65+)	나이별		성별		가구특성별	
		66~75	75세+	Men	Women	Single	Couple
한국	45.1	43.3	49.8	41.8	47.2	76.6	40.8
호주	26.9	26.1	28.3	24.6	28.9	49.9	17.7
캐나다	5.9	5.2	6.8	3.1	8.1	16.2	3.9
핀란드	12.7	8.2	19.5	6.5	16.9	28.0	3.9
프랑스	8.8	7.2	10.6	6.6	10.4	16.2	4.1
독일	8.4	6.5	11.1	5.1	10.8	15.0	4.7
일본	22.0	19.4	25.4	18.4	24.7	47.7	16.6
영국	10.3	8.5	12.6	7.4	12.6	17.5	6.7
미국	22.4	20.0	27.4	18.5	26.8	41.3	17.3
OECD	13.5	11.7	16.1	11.1	15.2	25.0	9.5

주: 1) 가처분소득 기준, 자영업자소득 포함, 가구사이즈에 따른 균등화 처리
자료: OECD(2011), 『Pension at a glance 2011』, p.149

노인인구의 주 수입원인 연금수령액은 1인당 1989년 102천원에서 1997년 1,511천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2009년에는 2,697천원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연금의 절대규모가 작아 총소득이 여전히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노인가구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009년 37.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2> 1인당 연금수급액¹⁾

구분	1989	1995	1997	2000	2003	2005	2009
전체	102	862	1,511	1,733	1,991	2,040	2,697
(노령연금)	-	983	1,318	1,351	1,870	1,876	2,706

주: 1) 연금총액을 총연금수급자로 나누어 계산
자료: 보건복지백서

5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1인포함 도시 전가구 노인빈곤율은 2006년 45.9%, 2009년 48.3%로 OECD 통계와 다소 다른데 이는 OECD에서 국제비교를 위해 일부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와 비교해보아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 등 공적부조는 크게 취약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총수입에서 공적부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에 지나지 않아 OECD국가 중 핀란드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표 II-63> OECD 국가의 소득 원천(mid-2000s)

구분	Public transfers ¹⁾	Work ²⁾	Capital ³⁾	(%) 합계
Finland	14.9	11.2	73.9	100.0
Korea	15.2	58.4	26.4	100.0
Mexico	21.4	54.4	24.3	100.0
United States	35.4	34.3	30.3	100.0
Australia	44.6	19.4	35.9	100.0
Turkey	46.3	40.9	12.8	100.0
Canada	46.7	13.4	39.9	100.0
Switzerland	48.1	11.8	40.1	100.0
Japan	48.3	44.4	7.3	100.0
Netherlands	48.4	9.8	41.8	100.0
United Kingdom	49.8	11.9	38.3	100.0
Ireland	53.6	20.9	25.4	100.0
Denmark	56.8	11.5	31.7	100.0
Iceland	61.4	28.5	10.1	100.0
Norway	61.7	11.2	27.1	100.0
New Zealand	64.4	15.1	20.5	100.0
Portugal	66.1	29.0	4.8	100.0
Greece	66.5	25.5	8.0	100.0
Sweden	70.0	9.0	21.0	100.0
Spain	70.8	24.1	5.1	100.0
Italy	72.5	23.6	4.0	100.0
Germany	74.9	9.9	15.2	100.0
Czech Republic	75.9	23.6	0.5	100.0
Poland	78.4	20.6	1.0	100.0
Luxembourg	79.3	12.0	8.7	100.0
Austria	79.4	19.1	1.5	100.0
Belgium	81.1	11.8	7.1	100.0
Slovak Republic	82.5	17.1	0.4	100.0
Hungary	85.6	11.8	2.6	100.0
France	86.7	6.4	6.9	100.0
OECD 평균	59.6	21.4	19.1	100.0

주: 1) Earnings-related pensions, resource-tested benefits, etc

2) 자영업자 근로소득 포함

3) Capital income includes private pensions as well as income from the returns on non-pension savings

자료: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p 147

자. 범죄율 및 자살률 급상승

소득수준은 올라갔지만 범죄율, 자살률 등이 급상승하고 있다. 살인 건수는 1985년 600건에서 2009년에는 1,390명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자살률은 일본을 크게 추월하여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노인자살률 급증이 자살률 상승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약 20년간 우리사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범죄율, 자살률 등 각종 사회지표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건수는 빠르게 상승하였는데, 가령 1980년에는 인구 십만명당 1,561건의 범죄발생에서 1990년 2,741건, 2009년에는 4,356건으로 급증하였다.

<표 II-64>

범죄 발생건수

(십만명당)

구분	1980	1990	2000	2004	2006	2009
범죄 발생건수	1,561	2,741	3,893	4,283	3,734	4,356

자료 : 대검찰청



강력범죄인 살인 건수는 1985년 600건에서 2009년에는 1,39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소득불균등의 확대와 사회적 스트레스 심화가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표 II-65> 살인 건수

(건)

구분	1985	1990	1995	1998	2000	2005	2009
살인 건수	600	666	646	966	964	1,091	1,390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자살자 수는 1983년 3,471명에서 2009년에는 15,413명으로 4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1990년대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증가, 경쟁격화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 심화와 생활고에 기인하였을 수 있다.⁵³⁾

<표 II-66> 자살자 수

(명)

구분	1983	1990	1995	2000	2005	2009
자살자 수	3,471	3,251	4,930	6,444	12,011	15,413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53) 신동준(2007),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사회정의시민행동 심포지엄자료집(한국 사회와 자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9년 현재 일본보다 높으며 미국, 영국, 노르웨이 보다 2~3배 높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이 1980년대 중반부터는 하락 추세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II-67>

자살률¹⁾ 국제비교

(명)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대만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1985	9.3	19.4	12.3	9.0	11.9	22.5	18.2	14.1
1990	7.6	16.3	12.4	8.1	6.7	20.0	17.2	15.5
1995	10.9	17.2	11.9	7.4	7.6	20.6	15.3	12.6
2000	13.7	24.1	10.4	7.5	11.1	18.4	12.7	12.1
2005	25.0	24.2	11.0	6.7	18.8	17.6	13.5	11.5
2009	31.0	24.4	-	6.9	-	16.3 ²⁾	12.7 ²⁾	11.9

주: 1) 10만명당 자살자수 2) 프랑스는 2007년, 스웨덴은 2008년 수치
 자료: 통계청(한국), 대만 통계청(대만), WHO(그 외 국가)

<그림 II-11> OECD 국가 평균 및 우리나라 자살률(명)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2009

우리나라 자살률 상승은 노인자살률 급증에 크게 기인한다. OECD가 작성한 아래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높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65~74세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1.8명으로 일본(17.9명)과 미국(14.1명)에 비해 4~5배에 달하고 OECD국가 평균에 비해서도 5배나 높다.⁵⁴⁾

<그림 II-12> OECD 국가별 연령별 십만명당 자살률(명)



54)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2009. 별도제공 EXCEL 파일

Ⅲ. 소득불균등 확대의 원인

1. 소득불균등과 여타 사회지표들 간의 관계

사회지표 중 자살률, 범죄율, 이혼율 등 사회적 갈등지표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자살률에 대해 소득분배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삶에 대한 행복도 및 만족도가 현저히 낮을 경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삶에 대한 행복도 및 만족도는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소득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상당부분 결정된다.⁵⁵⁾ 이에 따라 소득불균등이 확대될수록 저소득 및 빈곤층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면서 자살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소득불균등과 자살률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분배와 자살률과의 관계를 <그림 III-1>을 통해 도시해 보면 자살률과 지니계수 수준 변수들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추세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두 변수 증가율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 III-1>에서도 자살률과 소득분배지수 변동률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불균등의 상승이 자살률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득분배의 악화는 살인 등 범죄율을 높일 수 있다. 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개인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한 불만감의 증가는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 소득불균형과 범죄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한편 범죄율의 상승이 소득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두 변수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⁶⁾

55) 경제모형에서는 이를 external habit formation 형태의 효용함수로 나타내고 있다.

56) 대검찰청 DB ‘2010년 범죄개관’에 따르면 절도, 강도, 살인, 방화 등 주요 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이 가장 많다. 이와 같이 범죄자는 대부분 저소득자 계층이 많으며 재산범죄, 강력범죄 등의 검거율도 높다(대검찰청 통계 DB 참조). 따라서 범죄자는 대부분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범죄율의 상승은 소득불균등 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편 대부분의 강도 및

<그림 III-1>을 보면 우리나라 소득불균등과 살인율 수준 변수 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으며 <표 III-1>에서도 소득불균등과 살인율 변동률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1990년~2009년간의 사회지표 증가율 자료를 사용하여 추가로 실증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샘플 수가 많지 않아 추정결과를 엄밀히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추정결과를 보면 사회지표들이 소득분배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소득불균등 확대가 자살률과 살인 등 범죄율을 상승시켜 사회후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⁵⁷⁾

<그림 III-1> 우리나라 소득불균등(X축)과 자살률 및 범죄율(Y축)간 산포도



절도로 인한 피해규모는 소액이기 때문에 소득불균등을 개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7) 추정기간은 1990년~2009년이며 각 추정식의 샘플 수는 20개이다. 두 변수 증가율간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는 t값이며 각 추정식에서 지니계수의 추정치가 모두 5%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text{자살률}_t = 1.05 + 84.62 \cdot \text{지니계수}_t$ (2.04) (1.94)	$\text{살인율}_t = 0.05 + 9.58 \cdot \text{지니계수}_t$ (1.14) (4.57)
추정기간: 1990~2009년, 관측치수: 20, $\overline{R^2}=0.07$	추정기간: 1990~2009년, 관측치수: 20, $\overline{R^2}=0.15$

<표 III-1> 우리나라 소득불균등 변동과 사회지표 변동 간 시차상관계수

$$Correlation(Gini_t, SI_{t+m})$$

m \ SI	자살률	살인율	이혼율
+2	-0.142	0.142	0.058
+1	-0.268	-0.280	-0.086
0	0.342	0.444	0.181
-1	0.051	-0.021	0.122
-2	-0.234	-0.311	-0.243

사회지표 중 보건과 환경의 경우 주로 경제성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변수로 볼 수 있다. 보건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이 진행될수록 개선되며 환경은 경제성장 초기에는 공해배출 등으로 악화되었다가 성숙단계에 오면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살률과 범죄율과 같이 국민후생 및 행복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지표들이 소득불균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불균등을 완화하는 경우 여타 사회갈등지표들도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불균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 절에서 소득불균등 완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소득불균등이 확대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림 III-2>는 앞서 논의한 바에 따라 경제성장지표와 사회지표들간에 영향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III-2>

각 지표들 간 영향관계



2. 소득불균등 확대의 원인에 관한 논의

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불균등의 변화

경제성장은 소득불균등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부정적 영향을 보면,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가 소득불균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로 단순노동투입에 의해 생산되는 필수재 및 저가 상품보다 전문지식을 갖춘 숙련노동의 투입을 통해 생산되는 사치재 및 고급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숙련노동 임금이 더 빠르게 상승하고 이에 따라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경제성장의 긍정적 영향을 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성숙경제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보다는 소득분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잉여소득이 많으므로 세금부과를 통해 소득지원을 위한 재정확충이 용이하기 때문에 조세 및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소득불균등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수록 고용이 촉진되면서 저소득층의 가계수지도 개선되고 이에 따라 소득불균등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Kuznets는 역 U자 가설을 제기하면서 성장 초기에는 소득불균등이 악화되나 성숙경제에서는 소득불균등이 완화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즉 경제발전초기에는 물적자본 축적이 성장의 주된 요인이므로 물적자본 축적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부유층의 자본형성을 정부가 지원한다. 성숙경제에서는 인적자본이 성장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인적자본의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불균등이 완화된다고 한다.

<그림 III-3>은 전세계 108개 국가 및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소득수준(PPP 기준)과 소득불균등 정도를 비교해 본 것이다. 각 국가의 시계열은 1960년부터 2005년까지 매 5년 주기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세계 국가를 사용한 경우 두 변수 간 관계가 대체로 역 U자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⁵⁸⁾ 반면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OECD 국가만 대상으로 두 변수 간 관계를 보면 U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⁵⁹⁾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일부 국가들에서 소득불균등 정도가 상승하는 것은 이들 국가에서 부유층의 소득이 매우 높음에 따라 소득불균형 정도가 높아져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⁶⁰⁾ <그림 III-3>을 보면 대체로 두 변수 간 우하향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소득수준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소득불균등의 완화와 관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3> 일인당 소득수준(X축)과 소득불균등정도(Y축) 간 산포도
(전체국가) (OECD 국가)



주: 전세계 108개국을 대상으로 도출한 것이며 일인당 소득 수준은 원자료에 로그를 취한 것임

58) 두 변수 간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는 t값이며 모든 추정계수가 1%이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text{지니계수}_{i,t} = -132.1 + 46.07 \cdot \text{일인당소득}_{i,t} - 3.03 \cdot (\text{일인당소득}_{i,t})^2$$

(-4.36) (6.58) (-7.54)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365개, $\overline{R^2}=0.43$

59)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는 t값이며 모든 추정계수가 1%이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text{지니계수}_{i,t} = 912.5 - 176.9 \cdot \text{일인당소득}_{i,t} + 8.78 \cdot (\text{일인당소득}_{i,t})^2$$

(5.03) (-4.72) (4.53)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118개, $\overline{R^2}=0.33$

60) 초고소득국가에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의 경우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인적자본과 소득불균등

교육수준, 인적자본 등이 소득불균등과 깊은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다. 개인들의 부는 일반적으로 교육 및 인적자본을 통해 창출되거나 자본의 보유를 통해 창출된다. 많은 국민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인적자본이 용이하게 축적되는 경우 기회의 형평성 정도가 높아지면서 소득불균형 정도가 완화된다. 한편 물적자본은 인적자본에 비해 상속이 용이하므로 부의 창출에 있어 인적자본 보다 물적자본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소득불균등이 높아진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인들간에 인적자본의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물적자본의 소유는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교육 및 인적자본을 통해 창출되는 부의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불균등 정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I-4>를 통해 전세계 및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평균 교육년수와 소득불균등 정도 간 관계를 보면 교육년수가 길수록 소득불균등이 완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⁶¹⁾ 이는 교육이 강화된 나라에서 소득불균등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교육년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대졸자가 하향취업을 하는 경향이 있고 교육의 질이 낮은 대학이 다수

61) 두 변수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내의 값은 t값이며 추정계수가 1%이내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begin{aligned} \text{지니계수}_{it} = & 54.13 - 2.95 * \text{평균교육년수}_{it} \\ & (37.63) \quad (14.65) \\ \text{추정기간: } & 1960 \sim 2005 \text{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293개, } \overline{R^2} = 0.42 \end{aligned}$$

OECD 국가의 경우 두 변수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내의 값은 t값이며 추정계수가 1%이내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begin{aligned} \text{지니계수}_{it} = & 36.95 - 1.59 * \text{평균교육년수}_{it} \\ & (12.33) \quad (-4.85) \\ \text{추정기간: } & 1960 \sim 2005 \text{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103개, } \overline{R^2} = 0.19 \end{aligned}$$

존재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평균 교육년수는 외국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III-4> 평균 교육년수(X축)와 소득불균등정도(Y축) 간 산포도
(전체 국가) (OECD 국가)



다. 경제개방의 확대

일반적으로 경제개방의 확대는 기술변화와 더불어 소득불균등 확대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Jaumotte Lall and Papageorgiou(2008) 참조). 세계화 추이와 더불어 경제개방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상품시장개방의 효과를 보면 첫째, 저가 노동집약적 외국상품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소득불균등이 심화된다. 둘째, 경쟁력이 높은 기술집약적 상품의 수출이 증대되면서 숙련노동자의 소득이 더욱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업의 경영안정성이 저하⁶²⁾됨에 따라 기업은 고용유연성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62) 경제성장으로 민간자율경영이 중시되면서 기업에 대한 정부보호가 철폐된 점도 영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개방효과를 보면, 첫째, 저임금 외국인력의 유입이 증대되면서 국내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소득불균등이 확대된다. 둘째, 우수두뇌의 국외유출이 증대되면서 국내 숙련노동 및 전문직 노동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해당부문의 임금 및 소득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투자 및 금융시장 개방 효과를 보면 첫째, 해외 금융 및 실물 자산 투자기회가 확대되면서 고자산가의 소득이 더욱 증가한다. 둘째, 공장의 해외이전이 가능함에 따라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와 노조운동이 쇠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셋째, 해외자금의 신흥국내 주식투자가 증가하면 외국자본의 지분율이 상승한다. 이는 기업 및 금융기관 경영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주주이익중시 경영관행을 확산시킴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한 고용유연성 확대 및 하청업체 압박 강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경제개방의 확대에 의한 소득불균등 변화 효과를 감안하면 국내시장의 크기에 따라서도 소득불균등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인구가 많아 국내시장의 크기가 큰 국가의 경우 상품, 자본, 노동 등의 이동이 자유로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소득불균등 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개방도와 소득불균등 정도 간 관계를 <그림 III-5>를 통해 보면 대체로 무역개방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불균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³⁾ 그러나 OECD 국가만 대상으로 해서 두

63) 두 변수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내는 t값이며 두 추정계수가 모두 1%이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text{지니계수}_{i,t} = 32.32 + 0.037 * \text{무역개방도}_{i,t}$ (30.16) (2.87)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365개, $\overline{R^2}=0.02$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두 변수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내는 t값이다. 두 추정계수가 모두 1%이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text{지니계수}_{i,t} = 26.81 - 0.072 * \text{무역개방도}_{i,t}$ (20.37) (3.19)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118개, $\overline{R^2}=0.08$
--

변수 간 관계를 보면 무역개방도의 상승이 소득불균등 확대와 관계없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무역개방도의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크기 효과를 통제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III-5> 무역개방도(X축)와 소득불균등정도(Y축) 간 산포도
(전체 국가) (OECD 국가)



주: 무역개방도는 수출입규모를 명목GDP로 나눈 것임

라. 정부의 복지정책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도 소득불균등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미흡하면 소득불균등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간접세 비중이 높거나 세율의 누진성이 낮으면 소득불균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서민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제 혜택의 부여, 마이크로 크레딧 등을 통한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은 소득불균등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비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할수록 소득불균등이 완화된다.

일반적으로 복지지출이 많을수록 GDP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그림 III-6>을 통해 세계 각국의 정부지출 비중과 소득불균등

정도를 보면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⁶⁴⁾ 한편 OECD 국가의 경우를 보면 정부지출비중이 높을수록 소득불균등이 낮아지는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⁶⁵⁾

<그림 III-6> 정부지출비중(X축)과 소득불균등정도(Y축) 간 산포도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과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의 확대를 통해 소득불균등을 완화해 나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불균등 완화를 위해서는 조세부분의 역할강화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64) 두 변수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내는 t값이다. 정부지출비중 추정계수의 경우 10% 유의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ext{지니계수}_{it} = 33.83 + 0.057 * \text{정부지출비중}_{it}$$

(21.89) (0.71)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365개, $\overline{R^2} = -0.00$

65) OECD를 대상으로 한 두 변수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내는 t값이다. 추정계수가 모두 1%이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text{지니계수}_{it} = 30.92 - 0.506 * \text{정부지출비중}_{it}$$

(15.43) (-4.09)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118개, $\overline{R^2} = 0.13$

특히 세금 징수 및 납부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징세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가야 할 것이다.

마. 직업 안정성의 저하

근로자가 어떤 형태의 직업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소득불균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시직은 상용직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다. 이에 따라 직업의 안정성이 낮은 임시직의 비중이 확대될수록 소득의 불균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상용직 비중과 소득불균등 정도 간 관계를 <그림 III-7>을 통해 보면 상용직 비중이 상승할수록 소득불균등 정도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 변수 간 회귀분석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표본수가 다소 부족한 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⁶⁶⁾

<그림 III-7> 상용직비중(X축)과 소득불균등정도(Y축) 간 산포도(OECD)



66) 두 변수 간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는 t값이다. 정규직 비중의 추정계수는 10%내에서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text{지니계수}_{i,t} = 37.27 - 0.14 * \text{정규직비중}_{i,t}$$

(2.43) (-0.79)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42개, $\overline{R^2} = -0.00$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간 소득의 불균등 정도는 근로소득자 간 소득의 불균등 정도보다 높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낮다. 이에 따라 경제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소득불균등 정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각국의 자영업자 비중과 소득불균등 정도 간 관계를 도시한 <그림 III-8>을 보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소득불균등 정도도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⁷⁾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요국들에 비해 임시직 및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III-8> 자영업자비중(X축)과 소득불균등정도(Y축) 간 산포도
(전체 국가) (OECD 국가)



67) 두 변수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내는 t값이다. 추정계수가 모두 1%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text{지니계수}_{it} = 19.53 + 0.568 * \text{자영업자비중}_{it}$$

(16.13) (13.13)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248개, $\overline{R^2}=0.41$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두 변수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내는 t값이다. 추정계수가 모두 1%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text{지니계수}_{it} = 14.10 + 0.580 * \text{자영업자비중}_{it}$$

(12.32) (8.64)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108개, $\overline{R^2}=0.41$

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들 간 소득의 강제적 이전을 통해 분배체계를 왜곡시킴에 따라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지만 대체로 조정되는데 시차가 있으며 그 반영정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경우 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명목 GDP 증가속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부유층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져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실물자산의 보유 등을 통해 손실이 크지 않게 된다. 아울러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층의 경우 기업이 자금을 차입하는 주체이므로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이익을 보게 된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만연하면 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투자로 수익을 얻기 위한 투기 행태가 만연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은 소득불균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과 지니계수 간 관계를 도시한 <그림 III-9>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우 소득불균등도 대체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⁶⁸⁾ 그러나 추정계수 값이 매우 작아 인플레이션의 소득불균등에 대한 영향력은 실제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Bulir(2001)는 높은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바뀌면 소득불균등이 뚜렷이

68) 두 변수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내는 t값이다. 인플레이션을 추정계수는 5%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begin{aligned} \text{지니계수}_{it} &= 34.85 + 0.007 * \text{인플레이션}_{it} \\ &\quad (55.02) \quad (2.17) \\ \text{추정기간: } 1960 \sim 2005 \text{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 343 \text{개, } \overline{R^2} &= 0.01 \end{aligned}$$

OECD국가들 대상으로 한 두 변수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내는 t값이다. 인플레이션을 추정계수는 1%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begin{aligned} \text{OECD국 지니계수}_{it} &= 22.21 + 0.107 * \text{인플레이션}_{it} \\ &\quad (33.31) \quad (3.88) \\ \text{추정기간: } 1960 \sim 2005 \text{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 113 \text{개, } \overline{R^2} &= 0.11 \end{aligned}$$

개선되거나 낮은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추가로 낮아지는 것은 소득불균등 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고의 추정결과를 보면 인플레이션율이 10%이상이면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치지만 10%이하에서 변동하는 경우에는 소득불균등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⁹⁾

<그림 III-9> 인플레이션율(X축)과 소득불균등정도(Y축) 간 산포도
(전체 국가) (OECD 국가)



사. 자본소득의 비중 증가

일정기간동안 한 국가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형태로 배분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내 자본소득의 불균등은 근로소득의 불균등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국가들에서 근로소득과 임금소득을 합한 소득지니계수가 약 0.2~0.4 사이에 있는 반면 자산지니계수는 0.6~0.9 사이에 분포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⁷⁰⁾(<표

69)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는 t값이다. 설명변수 중 고(저)인플레이션율은 인플레이션율이 10%이상(이하)이면 인플레이션율을,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고인플레이션율 변수와 상수항만 1%이내에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text{지니계수}_{it} = 35.08 + 0.007 * \text{고인플레이션율}_{it} - 0.237 * \text{저인플레이션율}_{it}$$

(42.14) (2.68) (-1.20)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368개, $\overline{R^2}=0.01$

II-10과 II-11 참조) 이에 따라 한 국가 내에서 전체 부가 노동소득으로 배분되는 비율이 낮아질수록 소득불균등 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직접적인 경로 외에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자본소득비율의 상승이 소득불균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자산보유의 차이로 인해 부의 불균등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면 부의 대물림 현상이 강화되고 신분상승기회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서민들의 근로의욕과 인적자본 개발의욕이 저하되면서 소득불균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노동소득분배율과 지니계수간 산포도를 도시하면 두 변수 간에 우하향하는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⁷¹⁾ 이는 앞서 한 국가내에서 근로소득보다 자산을 통해 창출되는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불균등이 확대된다는 추론을 뒷받침한다. 한편 경제내 자산소득 비중의 상승은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의 상승, 재산상속 및 증여의 확대 등에 의해서도 확대될 수 있다.

70) 각 개인이 보유한 자산에서 $\alpha\%$ 만큼이 자산소득으로 창출된다고 하고 α 가 개인들간에 동일하다고 보면 자산보유의 불균등과 자산소득의 불균등은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서민의 경우 금융기관 이자소득이 대부분이지만 부유층의 경우 펀드, 부동산투자, 주식배당 등을 통해 금융기관 이자율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자산소득의 불균등 정도는 자산보유의 불균등 정도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71) 두 변수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내는 t값이며 모든 추정계수가 1%이내에서 유의하였다.

$\text{지니계수}_{it} = 36.87 - 23.20 \times \text{노동소득분배율}_{it}$ (7.76) (-2.86) 추정기간: 1960~2005까지 매 5년 주기 자료, 관측치수: 65개, $\overline{R^2}=0.18$
--

<그림 III-10> 노동소득분배율(X축)과 소득불균등정도(Y축) 간 산포도(OECD국가)



아. 기술진보와 소득불균등

기술진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득불균형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자동화의 진전 등으로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면 비숙련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숙련/비숙련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확대된다. 둘째, 기술진보는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발달 등을 통해 숙련노동 편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전문직 노동자의 생산성이 증대되면서 전문직 노동자의 소득이 비전문직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Acemoglu(1998)도 미국에서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로 인해 1980년대 숙련노동 공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임금 프리미엄⁷²⁾이 상승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Acemoglu(2002)는 숙련노동 공급의 증가가 숙련노동 편향적 기술진보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숙련노동 프리미엄이 상승하였는데 이는 IT 등 숙련편향적 기술의 진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기술진보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신상품을 출현시킨다. 이로 인해 신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노동자의 소득이 상승하면서 소득격차가 확대된다. 넷째,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 및 수송

72) 대졸자임금과 비대졸자 임금 간 상대적 격차로 숙련노동 프리미엄을 측정한 것이다.

비용이 줄어들고 대규모 조직, 물품, 서비스 및 인력의 관리가 용이해지면서 규모의 경제효과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 많은 자본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것이 단위생산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자본력이 큰 자산가의 수익이 증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의 기술진보를 경험하였으며 미래 기술진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R&D 투자비율도 높다. 이는 우리나라가 향후 기술진보와 관련한 소득불균등 확대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자. 전세계적 경쟁문화의 확산

70년대 이후 장기불황을 케인즈 경제학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자 80년대 들어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풍미하게 되었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정부 개입 및 규제를 줄이는 대신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중시한다. 또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공공복지 제도를 줄이며 국제적 분업을 위해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실물과 금융부문의 시장개방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시장내 자유경쟁을 강조하는 경향은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를 통해 전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문화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소득불균등이 확대되었다. II장의 <표 II-10>을 통해 각국의 소득불균등 지표의 변동을 보면 80년대 이후 악화되는 동조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소득불균등이 악화되었다는 점은 경쟁문화의 확산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전개하면서 경쟁적 경제질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경제개혁의 내용은 대부분 당시 구제금융을 제공했던 IMF와의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금융, 기업 지배구조, 노동, 공공 부문의 네 부문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었다. 이들 개혁 내용의 핵심은 이 분야들에 글로벌 기준을 도입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전반적으로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노동시장에서는 정리해고제나 파견근로제의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아졌으나 고용안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인수합병이 용이해지고 활발해짐에 따라 고용조정이 확대되었으며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금융부문을 보면 금융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와 은행의 상업성 회복,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 및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 강화, 자본자유화를 통한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확대, 금융감독업의 선진화와 금융감독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부문 전반의 개혁이 시행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경제는 종래의 일본식 자본주의에서 영미식 자본주의로 더 가까이 이행하게 되었다.

3. 소득불균등 확대 원인 실증분석

가. 기존연구

소득불균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먼저 Sarel(1997)은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투자율이 높을수록 소득분배는 개선된다고 하였다. Bulir(2001)는 경제발전, 고용증대, 재정의 재분배기능 강화, 물가의 안정 등이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Beck, Demirguc-Kunt and Ross(2007)는 금융발전이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장기효과를 분석하고 금융발전이 저소득층의 신용제약 완화를 통해 소득증대를 유발하므로 지니계수를 낮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Jaumotte, Lall and Papageorgiou(2008)는 기술변화가 세계화보다 불균등 확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무역자유화는 불균등을 낮추는 효과가, 금융자유화와 외국인직접투자는 불균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노선·김선아(2008)가 42개국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수준, 무역개방, FTA, 정부지출 등이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GMM 모형의 적합성이 낮아 Pooled OLS를 이용하여 추정결과를 도출하였다.

앞서 선행 연구들은 모두 주로 OLS를 이용하여 추정결과를 도출하였으며 IV 또는 GMM을 통해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보완하였다. 실증분석을 엄밀하게 수행하여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변수들 간 내생성문제를 해소하고 각 개별국가가 갖고 있는 관측되지 않는 개별속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주로 GMM 기법을 활용하여 추정결과를 도출하였으며 OLS는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⁷³⁾ 한편 본고는 System GMM 모형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System GMM 모형은 Difference GMM 모형이 갖고 있는 Weak Instrument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고에서는 소득불균등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실증분석 문헌에서 고려하지 않은 요인들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본고는 기존의 문헌과 달리 노동소득분배율과, 교육수준, 직업안정성 등과 관련한 변수를 설명변수에 추가하였으며 경제개방의 효과를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 국내시장 크기 효과를 통제하였다. 한편 본고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대리변수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진보와 관련한 변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나. 실증분석 방법 및 사용변수

본고는 1절에서 언급한 소득불균등 발생원인 중 대리변수를 확보할 수 있는 요인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108개 국가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각국의 소득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지니계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LIS(Louxiembroug Income Studies),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 MIL(Milanovic(2009)) 등 다양한

73) 한편 System GMM 모형의 경우 수준변수간 함수식을 사용하므로 Fixed Effect 모형 및 Random Effect 모형과 마찬가지로 개별효과를 반영하여 추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Fixed Effect 모형과 Random Effect 모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부문으로부터 확보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추정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GI_{i,t} = & \alpha + \gamma_1 Y_{i,t} + \gamma_2 (Y_{i,t})^2 + \gamma_3 OP_{i,t} + \gamma_4 POP_{i,t} + \gamma_5 SIR_{i,t} + \gamma_6 EDU_{i,t} \\
 & + \gamma_7 IF_{i,t} + \gamma_8 GOV_{i,t} + \gamma_9 LS_{i,t} + \gamma_{10} TEP_{i,t} + \epsilon_{i,t}
 \end{aligned} \quad (1)$$

* $GI_{i,t}$ 는 t기 i국의 지니계수, $Y_{i,t}$ 는 1인당 PPP기준 소득, $OP_{i,t}$ 는 무역규모/GDP 비율, $POP_{i,t}$ 는 인구수, $SIR_{i,t}$ 는 자영업자 고용비중, $EDU_{i,t}$ 는 평균교육년수, $IF_{i,t}$ 는 물가상승률, $GOV_{i,t}$ 는 정부지출, $LS_{i,t}$ 는 노동소득분배율, $TEP_{i,t}$ 는 비상근직비중임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소득불균등 정도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하여 1인당 PPP 기준 소득수준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소득수준 상승시 소득불균등이 역U자 형태로 변동할 경우 추정방정식 내 γ_2 계수는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경제개방도의 확대는 소득불균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γ_3 계수는 양의 값으로 예상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구가 큰 국가일수록 국내시장 규모가 크고 효율적인 경제주체가 더 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γ_4 계수는 양의 값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구가 많은 국가가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을 강하게 수행할 경우 γ_4 계수의 부호는 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영업자 비중과 비상근직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직업안정성이 낮고 소득불균등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γ_5 와 γ_{10} 계수는 양의 값으로 예상된다. 교육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이 인적자본을 통해 창출되는 정도가 많고 기회의 균등정도가 높기 때문에 γ_6 계수는 음의 값으로 추정된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국가의 경우 근로자가 손실을 보는 반면 자산보유자가 이득을 누리면서 소득분배가 왜곡되므로 γ_7 계수는 양의 값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지출이 많은 국가는 GDP 대비 정부지출이 많게 나타나므로 γ_8 계수는 음의 값으로 예상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분배는 개선되면서 지니계수가 낮아지는 효과가 예상되므로 γ_9 계수는 음의 값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 실증분석 결과

(1) 전체 국가

실증분석 결과는 <표 III-2>에 정리하였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과 비상근직 비중 자료는 OECD 국가에서만 확보가 가능하여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해당 설명변수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Pooled OLS 모형은 System GMM 모형의 추정계수 값이 유사하게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정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변수들이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며 추정계수의 부호도 이론과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인당소득)² 설명변수를 제거한 추정결과에서 (일인당소득) 변수가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고소득국가에서 소득불균등 정도가 낮음을 시사한다. OLS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반영하는 $\overline{R^2}$ 가 비교적 높은 값으로 도출되었다. GMM 모형에서 Sargan test 결과를 보면 추정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있는 경우 Sargan test가 귀무가설을 과도하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본고와 같이 많은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표 III-2>의 Sargan test 결과가 반드시 모형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설명변수별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인당 소득수준)과 (일인당 소득수준)²의 추정계수가 유의하며 (일인당 소득수준)²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으로 나타나 소득수준과 소득불균등은 역 U자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 U자의 꼭지점은 7.58(OLS)과 7.65(GMM)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각국 일인당소득의 전세계 평균값인 8.47

보다 약간 작은 값이다. 따라서 대체로 일인당 소득이 전세계 평균치 보다 작은 국가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불균등도가 확대되나 전세계 평균치 보다 큰 국가군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불균등도가 낮아지는 관계가 있다.

전체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무역비중은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 경제개방도의 확대가 소득 불균등 정도를 심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무역비중의 변동은 주로 개도국의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모형 적합성이 높은 <표 III-4>, <표 III-5> 참조) 인구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소득불균등 정도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소국에 비해 국내시장 규모가 큰 인구대국에서는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효율성이 높은 경제주체가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비중 추정계수는 예상과 부합하게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수가 많은 국가에서 직업안정성이 낮으며 소득불균등이 높은 경향이 있다. 평균교육연수는 대부분 예상과 부합하게 유의한 음의 값을 갖고 있어 인적자본이 많이 확충되어 있을수록 소득불균등 정도는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가상승률은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 인플레이가 높아지면 소득 불균등도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대체로 낮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인플레이는 소득불균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모형 적합성이 높은 <표 III-4>, <표 III-5> 참조)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소득불균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개도국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지출비중은 음의 부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개도국에서 정부지출이 사회복지보다는 공공부문 투자 등에 사용되거나 정부지출의 투명성이 낮은 경우 이와 같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정부지출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실증분석 결과 (전체 국가)

구분	Pooled OLS1		Pooled OLS2		System GMM1		System GMM2	
	Coeff.	S.E.	Coeff.	S.E.	Coeff.	S.E.	Coeff.	S.E.
(일인당소득)	39.970***	13.54	-6.428***	1.332	39.506***	3.422	-6.072***	0.440
(일인당소득) ²	-2.635***	0.754	-	-	-2.581***	0.193	-	-
무역비중	0.075***	0.012	0.074***	0.012	0.078***	0.004	0.074***	0.004
인구수	0.044**	0.020	0.038**	0.019	0.053***	0.005	0.047***	0.005
자영업비중	0.173*	0.103	0.178	0.126	0.195***	0.026	0.192***	0.025
교육년수	-0.497	0.352	-0.776**	0.381	-0.556***	0.132	-0.846***	0.126
물가상승률	0.010***	0.003	0.013***	0.003	0.002**	0.001	0.003***	0.001
정부지출비중	-0.086	0.118	-0.077	0.102	-0.037	0.038	-0.023	0.037
관측치수	183		183		183		183	
$\overline{R^2}$	0.662		0.623		31.84(0.000)		30.56(0.000)	
Sargan Test								

주: 1) 위첨자 *, **은 각각 5%, 1%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Sargan Test의 통계치는 χ^2 값이며 ()내는 유의수준임

3) 추정기간은 1960~2005년이며 5년 주기 자료를 사용

(2) 고소득(OECD) 국가

한편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저소득 국가와 다른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유사한 발전단계와 각종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OECD를 대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추가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III-3>과 같다.

추정결과를 보면 (일인당소득)²이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OECD국가 내에서는 소득과 소득불균등이 U자 형태의 관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U자 형태의 최저점에서 일인당소득(로그) 값은 OECD 평균 일인당소득(로그) 값인 9.66보다 소폭 큰 10.20(OLS) 또는 10.11(GMM)으로 나타났다. 한편 System GMM2의 추정결과를 보면

(일인당소득)항이 유의한 음의 값을 갖고 있어 대체로 소득증가와 더불어 소득불균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OLS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반영하는 $\overline{R^2}$ 가 비교적 높은 값으로 도출되었다. GMM 모형의 Sargan test 결과를 보면 추정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명변수별로 보면 전체국가 샘플의 결과와는 달리 무역비중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지출비중은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실증분석 결과(OECD국가)

구분	Pooled OLS1		Pooled OLS2		System GMM1		System GMM2	
	Coeff.	S.E.	Coeff.	S.E.	Coeff.	S.E.	Coeff.	S.E.
(일인당소득)	-144.9***	50.358	-7.562***	2.406	-124.1***	15.41	-5.579***	0.781
(일인당소득) ²	7.102***	2.555	-	-	6.138***	0.795	-	-
무역비중	0.001	0.018	0.018	0.017	0.007	0.007	0.023***	0.007
인구수	0.042***	0.009	0.050***	0.010	0.046***	0.005	0.054***	0.005
자영업비중	0.317***	0.071	0.264***	0.077	0.344***	0.036	0.320***	0.037
교육년수	-0.382	0.305	-0.229	0.325	-0.377***	0.108	-0.227**	0.109
물가상승률	-0.070**	0.034	-0.027	0.038	-0.038***	0.009	-0.018**	0.008
정부지출비중	-0.336***	0.111	-0.459***	0.117	-0.260***	0.055	-0.344***	0.055
관측치수	90		90		90		90	
$\overline{R^2}$	0.901		0.902		12.77(0.046)		23.32(0.001)	
Sargan Test								

주: 1) 위첨자 *, **은 각각 5%, 1%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Sargan Test의 통계치는 χ^2 값이며 ()내는 유의수준임

3) 추정기간은 1960~2005년이며 5년 주기 자료를 사용

<표 III-4>는 노동소득분배율 설명변수를 추가하여 실증분석한 것으로 앞서의 실증분석결과와는 달리 GMM 모형의 Sargan test 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아 추정모형이 적합함을 지지하고 있다. System GMM1에서 (일인당소득)²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System GMM2 모형에서

일인당소득 수준변수는 음의 값을 갖고 있어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소득불균등은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영업비중의 상승은 소득불균등을 확대시키며 교육연수, 정부지출비중, 노동소득분배율 등의 상승은 소득불균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무역비중과 물가상승률의 경우 대부분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⁷⁴⁾⁷⁵⁾

<표 III-4>

실증분석 결과(OECD국가)

구분	Pooled OLS1		Pooled OLS2		System GMM1		System GMM2	
	Coeff.	S.E.	Coeff.	S.E.	Coeff.	S.E.	Coeff.	S.E.
(일인당소득)	-33.62	86.11	-4.006**	2.024	-78.34*	47.36	-3.680**	1.524
(일인당소득) ²	1.503	4.392	-	-	3.790	2.402	-	-
무역비중	-0.004	0.015	-0.003	0.017	-0.006	0.012	-0.002	0.012
인구수	0.053***	0.015	0.055***	0.014	0.047***	0.010	0.051***	0.009
자영업비중	0.283***	0.097	0.265***	0.069	0.292***	0.074	0.242***	0.066
교육연수	-0.885**	0.360	-0.881*	0.358	-0.883***	0.212	-0.878***	0.207
물가상승률	-0.024	0.065	0.001	0.042	-0.013	0.053	0.055*	0.030
정부지출비중	-0.267*	0.146	-0.279**	0.135	-0.309***	0.115	-0.353***	0.110
노동소득분배율	-0.131***	0.050	-0.141***	0.035	-0.032***	0.012	-0.039***	0.011
관측치수	51		51		51		51	
$\overline{R^2}$	0.738		0.744		3.42(0.33)		4.11(0.25)	
Sargan Test								

주: 1) 위첨자 *, **은 각각 5%, 1%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Sargan Test의 통계치는 χ^2 값이며 ()내는 유의수준임

3) 추정기간은 1960~2005년이며 5년 주기 자료를 사용

<표 III-5>는 비상근(part time)직 비율을 설명변수에 추가한 것이다. System GMM 모형의 Sargan test 결과는 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내고 있다.

74) OECD국가의 경우 이미 경제개방도가 높음에 따라 무역비중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75)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소득 및 부의 재분배를 뚜렷이 초래할 정도로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다. 아울러 이들 국가에서는 물가상승이 명목 임금이나 금리에 반영되는 속도가 빠른 편이므로 물가상승이 소득불균등을 확대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인당소득)² 항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일인당소득)² 항을 제외한 System GMM2의 추정결과를 보면 비상근직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불균등이 악화되는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표 III-5>

실증분석 결과(OECD국가)

구분	Pooled OLS1		Pooled OLS2		System GMM1		System GMM2	
	Coeff.	S.E.	Coeff.	S.E.	Coeff.	S.E.	Coeff.	S.E.
(일인당소득)	-39.36	94.925	-4.94**	2.105	-83.69	56.29	-4.74**	1.839
(일인당소득) ²	1.747	4.843	-	-	4.001	2.857	-	-
무역비중	-0.001	0.016	0.000	0.018	-0.001	0.015	0.002	0.014
인구수	0.056***	0.016	0.058***	0.015	0.049***	0.012	0.053***	0.011
자영업비중	0.326***	0.101	0.304***	0.061	0.334***	0.088	0.282***	0.078
교육년수	-0.882**	0.388	-0.882**	0.385	-0.817***	0.261	-0.811***	0.254
물가상승률	-0.022	0.065	0.006	0.041	-0.017	0.064	0.056	0.036
정부지출비중	-0.221	0.145	-0.236*	0.131	-0.271**	0.136	-0.316**	0.128
노동소득분배율	-10.22*	5.819	-11.38***	3.736	-0.019	0.015	-0.027**	0.013
비상근직비율	0.132	0.105	0.134	0.103	0.117*	0.062	0.125**	0.060
관측치수	49		49		49		49	
$\overline{R^2}$	0.747		0.753					
Sargan Test					3.67(0.29)		4.11(0.25)	

주: 1) 위첨자 *, **은 각각 5%, 1%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Sargan Test의 통계치는 χ^2 값이며 ()내는 유의수준임

3) 추정기간은 1960~2005년이며 5년 주기 자료를 사용

IV. 소득불균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소득불균등의 심화는 여타 사회지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국민후생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소득불균등의 심화는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먼저 소득불균형의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에 부가 집중되면 물질 자본형성이 촉진됨에 따라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일반적으로 자유시장경제에서 효율적인 경제주체가 더 많은 보상을 얻음에 따라 소득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때 소득불균형은 경제효율성의 확대와 동시에 발생하므로 경제성과와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셋째, 소득불균등이 확대되면 부유층에 진입하려는 개인의 욕구가 증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개인의 근로의욕이 증대되는 동시에 자신 또는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는 인센티브가 강하여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아닌 자산소득으로 인해 소득불균형이 크게 확대된 경우 이러한 긍정적 유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인위적으로 조세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면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

소득불균등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불완전 금융시장 경로에 따르면 교육과 직업선택에는 비용이 소요되는데 불완전 금융시장으로 인해 신용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경제주체는 교육과 직업선택에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개인의 재능 및 노동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성장이 저해된다(Galor(2011)). 그리고 금융시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업가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과소투자가 발생하고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며 경제성장이 저해된다(Banerjee and Newman(1993)).

두 번째 경로인 정치경제학적 경로는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소득불균형이 증대되면 소득분배 개선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정치적 고려에 따라 소득 재분배 정책이 도입되면서 자원분배 체계가 왜곡된다. 이는 투자와 인적자본형성 저해하면서 성장을 정체시킨다. 한편 소득불균등이 높은 국가에서는 부유층이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 로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효율적 소득 재분배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인적자본형성을 저해하면서 경제성장을 정체시킨다(Saint-Paul and Verdier(1996), Benabou(2000, 2002)).

세 번째로 인적자본형성 경로를 통해 소득불균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에 대한 인적자본투자가 확대될수록 인적자본투자의 한계수익률은 감소한다. 따라서 소득불균등이 완화되어 인적자본투자가 개인들에게 분산될수록 전체 인적자본투자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반면 일부집단에 교육 및 인적자본투자 지출이 집중되면 경제전체 인적자본투자의 효율성은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불균등의 확대는 인적자본 투자의 효율성 저하를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특히 물적자본이 많이 확충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인적자본과 물적자본간 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불균등 완화를 통해 인적자본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다.

네 번째 경로는 직업선택과 관련되어 있다. 소득불안정성 및 소득격차의 확대는 개인들로 하여금 지대추구형 안전직업⁷⁶⁾ 선호심리를 강화시킨다. 이에 따라 우수인력이 경제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게 되면서 생산적인 부문에서 우수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다섯 번째는 세대 간 계층 유동성을 통한 경로이다. 소득불균등이 확대되면 상위계층에서의 교육기회의 독점으로 인해 경쟁에 노출된 정도가 낮아지므로 인적자본 확충 노력을 적게 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 실제로

76) 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

OECD 보고서(2008)도 소득불균형과 세대 간 계층 유동성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통합의 용이성에 관한 경로이다. 소득불균등이 완화되면 범죄율, 이혼율, 자살률 등이 줄어들어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그리고 경제적 동질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상호간 신뢰도가 높으며 협력이 용이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제반거래비용이 줄어들고, 구성의 오류, 모럴해저드, 쏠림현상 등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소득불균형의 축소는 사회적 비용 절감, 상호 협력과 신뢰 증진 등을 통해 경제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소득불균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실제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의 상대적 크기는 소득불균형의 원천이 근로소득인지 자산소득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소득불균등에 자산소득의 기여도가 클수록 부정적 효과가 근로소득의 기여도가 클수록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소득불균형의 정도가 경제성장률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두변수를 서로 비교하였다. <그림 IV-1>을 통해 각국의 t기 소득불균등 정도와 t 및 t+1기의 경제성장률 간 산포도를 보면 소득불균형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⁷⁷⁾

77) 두 변수 간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는 t값이며 모든 추정치가 5%이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text{경제성장률}_{it} = 3.37 - 0.043 * \text{지니계수}_{it}$ (9.20) (-4.08) 추정기간은 1960~2005까지이며 5년 주기 자료를 사용. 관측치수: 356개, $R^2=0.03$	$\text{경제성장률}_{it+1} = 2.87 - 0.026 * \text{지니계수}_{it}$ (6.33) (-2.09) 추정기간은 1960~2005까지이며 5년 주기 자료를 사용. 관측치수: 310, $R^2=0.01$
--	---

<그림 IV-1> 소득불균등 정도(X축)와 경제성장률(Y축)의 산포도



한편 현재 기의 소득불균등이 향후 일정기간동안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t 년의 소득불균등 정도와 t 년~ $t+n$ 년 중 경제성장률간 관계를 도출해 보았다. <그림 IV-2>를 통해 소득불균등 정도와 장기 경제성장률간 관계를 보면 대체로 소득불균등이 심화된 나라일수록 장기경제성장률도 낮은 것으로 도출되고 있다.⁷⁸⁾ Alesina and Rodrik(1994), Persson and Tabellini(1994), Perotti(1996), Galor(2011) 등은 실증분석을 통해 소득불균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손종철(2010)이 System GMM, 3SLS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개도국을 중심으로 소득불균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IV-1>과 <그림 IV-2>의 산포도는 이러한 기존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78) 두 변수 간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는 t 값이다. 모든 추정계수가 1%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95이후 경제성장률 _{it} = 3.72 - 0.043*지니계수 _{it} (95년) (7.42) (-3.20)	90이후 경제성장률 _{it} = 3.74 - 0.054*지니계수 _{it} (90년) (6.63) (-3.47)
추정기간은 1960~2005까지이며 5년 주기자료를 사용. 관측치수: 92, $R^2=0.07$	추정기간은 1960~2005까지이며 5년 주기자료를 사용. 관측치수: 74, $R^2=0.13$

<그림 IV-2> 소득불균등 정도(X축)와 장기 경제성장률(Y축)의 산포도

1990년 지니계수와
1990~2005년 경제성장률



1995년 지니계수와
1995~2005년 경제성장률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실현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크게 높였다. 경제규모 뿐 아니라 일인당 소득의 세계 순위가 빠르게 상승하며 절대적 빈곤이 줄고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살률, 범죄율 등 사회지표 또한 빠르게 악화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본고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되고 있다. 이는 세계화에 따른 개방과 경쟁의 심화, 그리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임시직,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지며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의 확대와 더불어 전반적인 소득분배가 빠르게 악화되어 오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구간 별로 보았을 때 상위층과 하위층의 비중이 늘고 중간소득층의 비중이 줄어드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오고 있다(<표 II-8> 참조). 이러한 소득의 양극화는 근로소득자 사이에 있어서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진행되어 오고 있다(<표 II-32>, <표 II-33> 참조).

소득분배의 불균형 심화와 각종 사회지표의 악화는 이미 1990년대에 추세적으로 심화되어온 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정책적, 제도적 대응은 적시에 이루어져 오지 못했다. 최근 들어 복지 논쟁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소외된 계층,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의가 크게 일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추세적으로 악화되었고 그 결과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가 과거 다른 어떤 나라에서의 경우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당사자, 사회, 국가의 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고 노인의 자살률이 다른 나라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등 우리사회의 여러 면에서 어두움의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경쟁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소득불균등 정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경쟁심화에 따라 그 만큼 사회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경쟁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 수출, 경상수지 등의 지표에 우선순위를 두어 왔고, 소득격차의 확대, 빈곤층에 대한 배려 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 OECD 국가들의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재정지출은 2007년 중 국민총생산의 약 20%에 달하는 데에 비해 이에 대한 우리의 재정지출은 아직 7.5%로 OECD 내에서 최하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OECD 2011). 물론 지난 약 10년간 복지지출의 성장세가 매우 빠르고, 또한 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더불어 연금,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지출이 현재의 프로그램 하에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여러 사회지표들의 움직임으로 볼 때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아직 미흡한 수준임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회지표를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오고 있는 소득분배의 불균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적인 국가로 자주 인용되었다. 일자리가 빠르게 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제 II장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약 20년간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중산층 그룹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2007년 소득계층 하위 10% 소득에 대한 소득계층 상위 10% 소득의 비율(가처분소득 경계값 기준)은 4.7로 이미 OECD 평균인 4.2보다 높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⁷⁹⁾은 2006년 기준 14.4%로 OECD국가 중 9번째로 높았다.⁸⁰⁾ 더구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이것이 소득 통계에 제대로

79) 중위소득 절반에 못 미치는 인구의 비율로 측정한다.

2) OECD(2011), "The OECD's Social Policy Brochure for Korea,".

반영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지니계수나 소득분위 등이 시사하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더욱 크게 악화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악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소득격차의 확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의 확대는 근로계층간의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부의 분배의 불균형 심화와 자산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득분배의 악화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⁸¹⁾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부동산 소유의 편중은⁸²⁾ 부의 불균등을 심화시키고 이에 따른 자산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상위 10%가 전체 순금융자산의 66.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⁸³⁾ 본고의 제 III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산소득의 비중이 커질수록 그 사회의 소득불균등 정도는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자산소득 간 불균등 정도가 근로소득 간 불균등 정도에 비해 높은 데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소득불균등 심화와 사회지표의 추세적 악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자산소득에 의한 소득불균등 확대 방지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그 사회에서의 자본축적은 높아지고 개인과 가계의 부의 수준도 높아진다. 그리고 이에 의한 자산소득의 규모도 커진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산소유의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81)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보유 형태별 비중을 보면 금융자산 21.4%, 부동산 75.8%, 기타실물자산 2.9%로 나타났다. 통계청·금감원·한국은행,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0.

82) 우리나라 토지는 개인토지소유자 1,367만명 중 상위 50만명이 소유한 토지비율이 2006년 현재 전체 토지소유의 56.7%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200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발표”보도자료 2007.

83) 이정희의원실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2000년~2007년) 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것이다. 자산은 크게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부동산 가격의 양등은 부의 불균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이것이 생산비용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고비용구조를 고착시키기도 한다. 2007년 중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총액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거주주택을 제외하면 상위 10%가 전체 자산총액의 7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자산도 1분위에서 3분위 가구는 전체적으로는 순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4분위 가구가 73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상위 5%가 전체 순금융자산의 50.1%, 상위 10%는 66.5%를 차지하고 있었다.⁸⁴⁾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지금보다 하향 안정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대 간 계층의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상속세의 과세를 보다 엄격히 하고 탈법적, 변칙적 상속과 탈세를 가능케 하는 각종 loophole을 줄이며 우리사회에서의 기부 문화의 강화 등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우리나라는 과거 비교적 저렴한 공교육 비용과 균등한 교육기회의 부여로 계층간 이동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의 부담 비율이 높은 점, 그리고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비의 부담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은 교육기회의 균등성과 향후 계층간 이동에 대한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제 III장의 실증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인적자본의 확대는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가 개인들의 인적자본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균등히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84) 이정희의원실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2000년~2007년) 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다 균등히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높이고 또한 계층간 소득수준의 이동이 보다 용이하게 하며 나아가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나아가 인구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결국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의한 잠재성장률의 유지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지식산업의 발전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부모의 소득수준에 지나치게 제약받지 않고 골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저리의 학자금 대출제도의 확대, 기업과 정부에서 각종 장학금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다.

나아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경험에 의하면 우수한 유아교육은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을 높임으로써 아동들,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향후 커다란 경제, 사회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과거에 비해 다소 나아지긴 하지만 제 II장에서 본 바와 같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조세,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전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정정책(조세, 이전지출)은 우리의 경우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 재정정책 이전의 지니계수와 재정정책을 통해 개선된 지니계수 사이의 차이를 보면(<표 II-40>),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0.017로 프랑스 0.20의 8.5%, 일본

0.12의 14.2%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세와 이전지출 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보다 효과적이 되도록 재정정책의 적극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세수 구조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간접세의 비중이 높고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크게 낮기 때문이며 또한 선진국들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tax credit 등 소득지원제도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 아닌가 보여진다.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서구 선진국에서의 세제개편의 추세는 간접세의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다. 이는 기업과 인력이 국경 없이 넘나드는 상황에서 직접세를 올릴 경우 기업과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 일자리 창출과 세수를 오히려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개인소득세의 세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⁸⁵⁾ GDP 대비 개인소득세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제 II장 <표 II-41>) 개인사업소득자에 대한 세원의 포착 정도가 낮은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등으로 지난 10여년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다 많은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전지출제도의 확대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OECD 보고서(2011)에 의하면 2006년 중 평균적으로 한국 가정은 정부로부터 복지수당으로 소득의 4%만을 받고 있으며 소득의 8%이하를 세금과 사회분담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최저 수준이다. 일반적인 OECD 국가에서는 복지수당이 소득의 약 22%에 달하며 납부세금은 약 29%에 달하고 있다(OECD 2011). 따라서 현재 약 3%만의 인구에 대해 지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질적 빈곤계층에 대해 보다 유효한 지원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85) 2010년 Personal taxation의 Effective tax rate을 보면 우리나라는 17.9%로 일본(25.7%), 중국(25.4%), 미국(24.3%), 영국(31.5%), 독일(34.8%), 프랑스(34.7%), 이태리(42.6%) 등에 비해 낮다. (Financial times, 2011.9.6)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8년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도 빈곤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노동시장의 이중성 완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소득분배의 악화를 막기 위해 중요한 과제다. 비정규직은 아무래도 기업의 훈련이나 인적자본 축적에 있어 소홀하기 쉽고 결국 소득분배 뿐 아니라 경제전체의 인적자본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약 3~4년 간 전체고용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마도 2007년 도입 이후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영향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또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해고가 많아 이들의 전체고용에서의 상대적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설적이게도 기업으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통한 고용 인센티브를 줄이고 정규직에 대한 고용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의 강력한 노조활동, 그리고 글로벌화에 따른 대기업간의 국제경쟁 심화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압력으로 작용하게 하여 이것이 대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해고요건의 완화 등을 포함하는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 완화는 궁극적으로 정규직 고용의 비용을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리라 생각된다.

5. 노인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에 비해 약 3~4 배에 달하는 실정이다(2000년대 중반 기준). 이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 있어 최근 몇 십년간 노년층 빈곤이 상당히 감소해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부모부양, 이혼, 출산, 가족의 규모 및 형태와 관련한 우리사회의 관습과 문화가 급속히 바뀌는 상황에서 연금제도의 미숙과 개인의 노후대책이 되어있지 않은 반면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다. 노인자살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제 II장에서 본바와 같이 이의 주요인이 질병과 경제적 이유이다. 독거노인, 빈곤층 노인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해 보인다. 지난 약 5~6년 동안 노인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제 수혜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이 제도들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노년층 중 근로 수입이 없는 경우 빈곤율이 70%에 달하는 점은 무엇보다 우리의 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었고, 연금의 수혜계층이 적음을 말해주고 있다. 향후 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완화되겠지만 지금도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은 크게 낮은 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연금 가입 비중을 늘리고⁸⁶⁾, 또한 기업연금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하도록 제도적, 세제상 유인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일터에서 정년을 점점 연장해 나가는 것도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연금의 고갈을 막고 장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86)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010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률은 46.9%, 고용보험 52.1%, 산재보험 93.1%, 건강보험 49.5% 등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0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2011) 한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1%로 추정되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08년 실시한 베이비 붐 세대 대상 패널조사 결과”)

6.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환율, 부동산가격 등 자산가격의 왜곡과 경제불안정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율이 경제 기초여건에 비해 큰 폭으로 절하될 경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영업잉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소득분배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림 II-5> 참조). 또한 이는 수출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의 이익의 격차를 가져와 근로소득자 간 소득의 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환율정책과 통화정책을 포함한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은 소득불균등 심화의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저축과 투자, 성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줄이지 않으면서 소득분배의 악화를 완화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향후 정책적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개방과 국제화,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지금과 같은 세계경제 환경에서 우리경제의 성장과 활력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선택이다. 그러나 이에 부수하는 소득격차의 심화와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가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은 언제나 중요한 목표다. 그러나 일인당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등은 평균의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⁸⁷⁾ 우리 국민생활의 실상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각종 사회지표들의 변화에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가 적절히 대응을 해주어야 국민생활 전반의 수준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안정과 통합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며 나아가서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87) 그런 의미에서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국민소득 통계와 더불어 공동으로 정책 평가지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정부의 재정지출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복지제도와 재원의 확충은 필요한 것이지만 과거 유럽선진국들의 경험을 볼 때 이것이 결국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데 실패함으로써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으로 선회하게 되었으며, 이는 다시 소득격차의 확대와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거울삼아 경제의 효율성을 장려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균형을 조심스럽게 선택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부유층, 기업들의 사회적 기여를 늘리고 민간부문 내에서 나눔의 문화와 관행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 우리사회가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고문

- 김수현 (2009), 『한국의 빈곤』.
- 김태완 (2009), “경제위기 이후 정책적 노력과 빈곤 및 불평등 변화”,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0-32.
- 곽승영 · 이영선 (2010), “한국경제의 이행과정과 선진국이 되기 위한 요건”.
- 곽노선 · 김선아 (2008), “소득분배 결정요인 연구: FTA 효과 및 Kuznets 곡선 검증,” 국제경제연구 제14권 제2호.
- 곽승영 (2010), “An analysis of Income Inequality in Korea, 1965-2008 and Policy Suggestions: the Role of Winner-Take-All Socio-Economic Milieu, Globalization, Technological Changes, and Education(경제학 공동학술회의 발표자료).
- 남상 (2009), “한국 가계자산의 분배와 불평등 요인분해,” 경제연구 제27권 제2호.
- 노대명 (2008), “서구 근로빈곤 문제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2008-18-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반정호 (2010), “고용구조 변화와 임금불평등: 종사상지위를 중심으로,” 월간노동리
- 박명호 (2010), “스티글리츠 위원회와 경제사회 발전지표”.
- 박충렬 (2010), “경제적 성과와 사회진보의 합리적인 측정을 위한 몇 가지 제언”, 국회입법조사처보 통권7호, 2010년 겨울, pp. 60-69.
- 성명재 (2010),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의 주요 특징 및 요인별 분해,” 한국조세연구원 현안분석.
- _____ (2001),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working paper.
- 손종칠 (2010), “소득불균형과 경제성장간의 관계: Cross-country 비교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제 425호.

- 신동균 (2007)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양극화의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經濟學研究* 제755집 제4호.
- 유경준 (2009),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_____ (2007), “소득불평등 개념 인식의 국제비교와 실태”, 한국개발연구원.
- _____ (2003),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여유진, 김태완 (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 동향과 정책방향,” *보건사회연구* 제26권 제1호.
- 은기수 (2005),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의 상관성: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인구학* 제 28권 제2호.
- 박종순 · 이준영 · 김순덕 (2003),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예방의학회지* 제 36권 제1호.
- 이정우 (2010), 『불평등의 경제학』 .
- 전병유 외(2006),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조윤제 (2001), “國際經濟環境과 韓國의 經濟發展”,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금융경제연구 제116호.
- _____ (2001), “대외사건과 한국의 경제발전: 1950~70년대 외무의 역할을 중심으로”, 『경제분석』 7(1), 한국은행.
- _____ (2006), 『한국경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금융연구원.
- _____ (2009), 『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 : 새로운 정치, 경제의 틀을 찾아서』, 한울.
- _____ (2011), “한국의 경제정책과 공정사회”(경제학 공동학술회의 발표자료).
- 정후식 (2011), “일본의 노후난민 시대 도래와 정책대응”, 한은조사연구.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매년).
- _____ (2006), “장래인구추계 결과” 보도자료.

Acemoglu, Daron (1998), “Why Do New Technologies Complement Skills? Directed Technical Change and Wage Inequal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Acemoglu, D. (1998), “Why do new technologies complement skills Directed technical changes and wage inequal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Acemoglu, D. (2002), “Directed Technical Change”, *Review of Economic Studies*.
- Alesina, A. and Rodrik, D. (1994), “Distributive Politics and Economic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2): 465–490.
- Beck, T., A. Demircuc-Kunt and L. Ross (2007), “Finance, Inequality and the Poor,” *Journal of Economic Growth*.
- Berg, Andrew G. and Jonathan D. Ostry (2011),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 Bulir, Ales (2001), “Income Inequality: Does Inflation Matter?,” IMF Staff Papers, Vol. 48, No. 1.
- Galor, Oded (2011), “Inequality, Human Capital Formation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Education*, North-Holland.
- Jaumotte, Florence, Subir Lall, and Chris Papageorgiou (2008), “Rising Income Inequality: Technology, or Trade and Financial Globalization?” IMF Working Paper, WP/08/185.
- Lemieux, T., W. MacLeod, and D., Parent (2007), “Performance Pay and Wage Inequality,” IZA Discussion Paper No. 2850.
- Michael Sarel (1997), “How Macroeconomic Factors Affect Income Distribution: The Cross-Country Evidence,” IMF Working Paper, WP/97/152.
- OECD (2008), “Glowing Unequal –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 _____ (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

- _____ (2010),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
- _____ (2011), 『Pension at a glance』 .
- _____ (2011), “The OECD’s Social Policy Brochure for Korea”.
- Perotti, R. (1996). “Growth, Income Distribution, and democracy: what the Data say”, *Journal of Economic Growth*, 1(2): 149–187.

<http://www.who.int/whosis/whostat/en/>

<http://titania.sourceoecd.org/>

<http://www.oecd-ilibrary.org.dl.bok.or.kr:8000/statistics>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http://ecos.boknet.intra/Index.jsp>

<http://www.nts.go.kr/>

<http://www.stat.go.jp/>

<http://www.worldbank.org/>

http://pwt.econ.upenn.edu/php_site/pwt_index.php

<http://www.barrolee.com/>

<http://www.bea.gov/>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http://eng.stat.gov.tw/>

<http://hdrstats.undp.org/en/indicators/61006.html>

<http://www.stat.go.jp/data/kakei/index.htm>

<부록 역대 정부별 주요 복지법안

1. 박정희정부(1961~1979)

- 기초적인 사회복지법을 재정비하고, 현대 사회복지제도의 핵심인 사회보험법을 제정
 - 생활보호법(1961), 군인연금법(1963),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 의료보험법(1963), 공무원연금법(1960) 등
 - 1976년 의료보호법 제정, 1977년 1월부터 의료보호(의료부조) 시작

2. 전두환정부(1980~1987)

- 민주화운동 등으로 '3대 복지입법' 실시
 - 1988년 1월 최저임금제 시행
 - 1988년 1월 국민연금 시행
 - 1987년 12월 의료보험법 개정을 개정하여 노태우정부 시기인 1989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3. 노태우정부(1988~1992)

- 국민들의 요구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함양하는 데 주력
 - 1989년 '국민의료보험법'에 거부권 행사
 -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추진(300인이상 사업장)
 - 1991년 사내복지기금법 시행으로 기업의 복지제공 책무 법제화

4. 김영삼정부(1993~1997)

- OECD 가입을 계기로 세계화시대에 과거와 다른 복지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에 기여
 - 1995년 고용보험 시행(노태우정부에서 발의)
 - 1995년 농어촌연금 시행
 - 1997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직장조합 제외, 공무원·교원 의료보험 조합과 지역 의료보험조합을 통합)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5. 김대중정부(1998~2002)

- 외환위기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사회보장 제도를 크게 개선·확대
 - 1999년 3월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연금 확대
 - 1999년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 기획단'을 출범시켜 4대 사회보험의 통합관리 모색
 - 1998년 10월 고용보험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
 - 2000년 7월 산재보험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공적부조제도의 획기적 개선
 - 2000년 직장의료조합까지 포함하여 의료보험을 통합
 - 2002년 의료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기간 제한 해제
 -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구분 없이 국민연금을 전 국민에게 적용

6. 노무현정부(2003~2007)

-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
 - 2004년 만 5세아 무상보육확대, 2005년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제도 실시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단행(소득대체율 단계적 인하)
 - 2007년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 빈곤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인상, 긴급지원제도 도입
 - 2008년 1월 근로장려세제 시행
 - 장애인 복지 강화(장애수당 수급자 증가)

301	조세 종류별 후생효과 분석(2007.5)	박성욱
302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 요인 - 기업경영 관련 여건을 중심으로(2007.6)	전봉걸 · 권철우
303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의 관계 분석(2007.6)	김현정
304	출산율저하가 인적투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2007.7)	김기호 · 유경원
305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 및 건전성 분석(2007.8)	정형권
306	최근 통화량의 변동요인 분석 - 주택가격을 고려한 통화수요함수 추정(2007.8)	유병학
307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분석(2007.8)	김우영
308	비용상승 충격의 불확실성과 통화정책(2007.9)	정규일
309	2007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 - Monetary Policy Communication and Credibility in a Financially Globalized World(2007.9)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310	금융기관 해외투자 확대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2007.9)	강종구
311	외환위기 전후 원·달러 환율의 변동요인 비교분석(2007.10)	김윤영
312	가계의 교육비와 저축간 관계 분석(2007.10)	유경원
313	The Political Economy of 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 The Chiang Mai Initiative(2007.10)	Hyoung-kyu Chey
314	Forecasting Output Growth and Inflation - How to Use Information in the Yield Curve(2007.10)	Huiyu Huang · Tae-Hwy Lee · Canlin Li
315	How Much Inflation is Necessary to Grease the Wheels?(2007.12)	Jinil Kim · Francisco J. Ruge-Murcia
316	선진적 금융세계화를 위한 전제조건 분석(2008.1)	김희식
317	물적·인적자본의 한계생산성 분석(2008.1)	박성욱
318	중국의 금융개혁과 은행산업 생산성변화(2008.1)	오대원

319	개방경제하에서의 최적 통화정책(2008.1)	정용승
320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과 과제(2008.1)	홍재범
321	Explaining the Cyclical Behavior of the Korean Labor Market(2008.2)	Weh-Sol Moon
322	Inventory, Factor-Hoarding and the Dynamic Response to Monetary Shocks(2008.2)	Kwang Hwan Kim
323	원/달러 무위험 금리차의 특성에 관한 연구(2008.2)	송치영
324	Total Factor Productivity by 72 Industries in Korea and International Comparison(2008.2)	Hak K. Pyo · Hyunbae Chun · Keun Hee Rhee
325	Market Services Productivity in Korea: An International Comparison(2008.2)	Hyun Jeong Kim
326	A Political Economic Critique on the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 and the Implications for East Asia(2008.3)	Hyoung-kyu Chey
327	The Growth and Determinants of Vertical Trade in Korea(2008.3)	Young Kyung Suh
328	제조업 업종별 특성과 수출경쟁력(2008.3)	권철우 · 전봉걸
329	Competition in the Credit Rating Industry(2008.3)	이인호
330	Non-Interest Income of Commercial Banks: Evidence from OECD Countries(2008.3)	Joon-Ho Hahm
331	An Assessment of the New Keynesian Phillips Curve in the Korean Economy(2008.3)	Bae-Geun Kim · Byung Kwun Ahn
332	미 달러화 환율의 장단기 결정요인 분석(2008.4)	김윤영
333	중국 제조업의 효율성 변화와 시사점(2008.4)	오대원
334	사교육투자의 효율성 분석(2008.4)	이찬영
335	외환거래 확대의 시장안정효과 분석(2008.5)	김희식
336	Do Capital Adequacy Requirements Really Matter(2008.5)	Junhan Kim
337	물가안정목표제하에서 자산가격 변동과 경제안정(2008.5)	김양우 · 우준명

338	기혼여성의 맞벌이 결정요인 분석(2008.6)	김우영
339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기술진보 확산효과 분석(2008.8)	박성욱
340	The Cost Channel Effect of Monetary Policy in Korea(2008.8)	Myung-Soo Yie
341	해외 공급충격과 개방경제의 최적 금리준칙(2008.8)	김근영
342	고용보호제도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2008.8)	문외솔
343	장·단기 금리격차의 생산갭 예측력 분석(2008.9)	이명수
344	고용구조의 변화와 학력별 임금격차(2008.9)	김우영
345	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행태 분석(2008.9)	이찬영
346	Estimation of Hybrid Phillips Curve in Korea(2008.9)	Woong Kim
347	Can the European Monetary System Be a Model for East Asian Monetary Cooperation?(2008.10)	Hyoung-kyu Chey
348	주택 가격지수 산정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이용한 실증연구(2008.10) KAIST 금융공학연구센터	
349	2008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 - Recognizing and Coping with Macroeconomic Model Uncertainty in Designing Monetary Policy(2008.10)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350	소비자물가에 대한 유가 및 환율충격의 비대칭성·비선형성 분석(2008.11)	김기호·윤성훈
351	불완전 환율전가하에서 환율이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2008.11)	윤성훈·김귀정
352	Inflation Volatility and Stock Returns: Some International Evidence(2008.11)	Ky-hyang Yuhn·Sang Bong Kim
353	외환시장압력과 국외부문 통화공급 변동의 관계 분석(2008.11)	김용복
354	통화적 물가결정이론으로 본 장기균형물가와 인플레이션(2008.11)	김배근
355	물가·성장간 관계변화 분석(2008.11)	송승주

356	The Impact of Foreign Bank Penetration on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in Emerging Economies: Evidence from Bank-level Data(2009.1) Ji Wu · Alina C. Luca · Bang Nam Jeon	
357	국가별 금리차의 요인분해(2009.1)	유복근
358	글로벌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한 해외충격의 파급효과 분석(2009.1) 김윤영 · 박준용	
359	통화옵션을 이용한 미래 원/달러 환율의 위험중립 확률분포 추정(2009.1) 이승환	
360	통화정책과 주식수익률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과 시사점: 한국의 경우(2009.2) 이상규 · 김양우 · 우준명	
361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과 대출경로(2009.2)	김준한 · 이명수
362	지적재산 보호와 경제성장(2009.2)	박성욱
363	Opening to Capital Flows and Implications from Korea(2009.2) Kyungsoo Kim, Byoung-Ki Kim and Young Kyung Suh	
364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2009.2)	박강우 · 홍승제
365	Market Structure, Bargaining, and Covered Interest Rate Parity(2009.2) Byoung-Ki Kim	
366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분석(2009.2)	김현정 · 김우영 · 김기호
367	우리나라 기업의 가격결정행태 분석(2009.2)	김웅 · 홍승제
368	The Impact of Affinity on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 Case of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2009.3) Hyoung-kyu Chey	
369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생산성: Baumol 효과를 중심으로(2009.3)	오완근
370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술진보 격차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2009.3)	김배근
371	The Estimation of Capital Stocks,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Potential GDP(2009.3) Hak K. Pyo · Sunyoung Jung	
372	Does the Liquidity Effect Guarantee a Positive Term Premium?(2009.3) Kyuil Chung	

373	개별가격변동과 통화정책(2009.3)	박강우
374	우리나라에서의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 평가(2009.3)	김웅
375	Labor Market Frictions and Wage Contracts(2009.3)	문외솔
376	채무 만기연장에 관한 게임이론적 분석(2009.3)	정형권
377	개인저축률과 거시경제변수간 관계분석(2009.3)	송승주
378	환율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2009.4)	김용복 · 곽범준
379	가계채무구조와 사교육비 지출 행태(2009.4)	이찬영
380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2009.4)	김우영 · 김현정
381	Are Structural Parameters of DSGE Models Stable in Korea?(2009.4)	Jiho Lee
382	Double Drain, Risk of Recession and Monetary Policy in Small Open Economies(2009.5)	Geun-Young Kim
383	A Way Forward for Asian Bond Market Development(2009.5)	Hong Bum Jang · Suk Hyun
384	개방경제의 실질소득지표에 대한 연구(2009.6)	김배근
385	실물 · 금융변수와 주택가격간 동태적 상관관계 분석(2009.6)	손종철
386	은행의 비이자영업 확대와 시스템 위험(2009.6)	김기호 · 윤성훈
387	2009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 - The Credit Crisis: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Policy Implications(2009.6)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388	낙인효과(stigma effect)와 자본이동성이 국채 CDS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 (2009.7)	김용복
389	Comparative Advantage and Labor Market Dynamics(2009.7)	Weh-Sol Moon
390	투자자의 시장심리를 반영한 자산가격 변동요인 분석(2009.8)	김윤영 · 이진수
391	주가와 채무구조 정보를 이용한 기업부문 신용리스크 측정(2009.8)	이승환
392	직접투자 유출입이 경기동조화에 미치는 영향(2009.8)	황광명

393	은행부문의 통화불일치 평가와 발생요인 분석(2009.8)	서영경 · 김근영
394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A Model of Cournot Competition and Bargaining with Outside Option(2009.9)	Byoung-Ki Kim
395	The Determinants of Informal Sector and Their Effects on the Economy : the Case of Korea(2009.9)	Donghun Joo
396	산업간 지식전파효과 분석 : 사업서비스를 중심으로(2009.9)	김현정
397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분석(2009.9)	김웅
398	다부문 경제성장모형에 의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평가(2009.9)	김배근
399	최적필터(optimal filter)를 이용한 우리나라 주가지수의 확률변동성 및 점프 추출(2009.9)	윤재호
400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한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연구(2009.10)	임진
401	중고령자의 은퇴결정요인 분석(2009.10)	손종철
402	금융 시스템리스크를 감안한 금융기관 자기자본 규제정책(2009.10)	서상원
403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Evidence from Stock Prices(2009.10)	Xiaodan Zhao · Yoonbai Kim
404	'Sleeping with the Enemy' or 'An Ounce of Prevention': Sovereign Wealth Fund Investments and Market Destabilization(2009.10)	April Knill · Bong-Soo Lee · Nathan Mauck
405	Fluctuations in Exchange Rates and the Carry Trade(2009.10)	Kyuil Chung · Òscar Jordà
406	실물경기변동모형에 의한 경기침체 요인분석(2009.11)	송승주
407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2008년 위기(2009.11)	양동휴
408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 변화 분석 :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중심으로(2009.11)	유복근 · 최경욱
409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East Asia: How Has Korea Managed the Crisis and What Has It Learned?(2009.11)	Yung-Chul Park
410	가구패널자료 접속을 통한 가계의 유동성제약 변화 연구(2009.11)	김기호
411	자본유출입의 경기순응성과 파급경로(2009.12)	송치영 · 김근영

412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2009.12)	장지상 · 이근기
413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2009.12)	황상필
414	Macro Prudential Supervision in the Open Economy, and the Role of Central Banks in Emerging Markets(2010.2)	Joshua Aizenman
415	Risk-Factor Portfolios and Financial Stability(2010.2)	Gus Garita
416	신용마찰의 경제환경 하에서의 통화정책에 대한 연구(2010.2)	정용승
417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2010.2)	윤재호 · 김현정
418	Measuring Systemic Funding Liquidity Risk in the Interbank Foreign Currency Lending Market(2010.2)	Seung Hwan Lee
419	선물환시장의 효율성과 무위험금리차(2010.2)	황광명
420	금리정책 동조화의 경로 분석(2010.2)	임진 · 서영경
421	외국자본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2010.3)	김승원
422	횡단면분포 특성을 이용한 기업의 경기반응 분석(2010.3)	김웅
423	경제성장과 사회후생간의 관계(2010.3)	강성진
424	불확실성이 설비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분석(2010.3)	홍성표
425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Cross-country 비교분석(2010.3)	손종철
426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거래차익 - 한국의 사례(2010.4)	유복근
427	Local Sharing of Private Information and Central Bank Communication(2010.4)	Byoung-Ki Kim
428	조건부 도산확률을 이용한 은행부문의 시스템리스크 측정(2010.4)	이승환
429	Optimal Discretionary Policy vs Taylor Rule: Comparison under Zero Lower Bound and Financial Accelerator(2010.4)	Donghun Joo
430	개방경제의 금리기간구조 분석(2010.5)	박하일
431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을 이용한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기술적 효율성을 감안한 접근방법(2010.8)	정선영

432	인구 고령화와 금융자산선택: 미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2010.8)	이상호
433	창립 60주년 기념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 - The Changing Role of Central Banks(2010.8)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434	은행 예대금리 행태 분석(2010.8)	윤재호
435	Managing Openness: Lessons from the Crisis for Emerging Markets(2010.10) Barry Eichengreen	
436	환율동학에 대한 기대와 통화정책의 유효성(2010.10)	김근영
437	Wage Inequality and the Efficiency of Workers in Korea, 1965 - 2007(2010.10)	곽승영
438	은행의 레버리지 행태와 유동성 창출(2010.10)	이승환
439	Theories of International Currencies and the Future of the World Monetary Order(2010.11) Hyoung-kyu Chey	
440	Regional Economic Disparity, Financial Disparity, and National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China(2010.11) J. Peng, Bong-Soo Lee, G. Li and J. He	
441	인플레이션 타게팅에 관한 최근 논의(2010.11)	김병기, 송승주
442	An Empirical Evaluation of Two Financial Accelerator Mechanisms: the Balance Sheets Effects of the Bank versus Those of the Firm(2010.11)	Donghun Joo
443	유동성위험과 금융규제간의 관계분석(2010.11)	강종구
444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 유입에 미치는 영향(2010.11)	김승원
445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2010.11)	이상호, 이상현
446	우리나라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의 특징(2010.12)	오금화
447	국가간 포트폴리오 투자와 은행대출을 중심으로 살펴본 글로벌 불균형의 현황과 과제(2010.12)	이현훈
448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Mechanism with respect to the Moral Hazards of Financial Intermediaries(2010.12)	김영한
449	Free Trade Agreement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 The Role of Endogeneity and Dynamics(2010.12)	이준수

450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창출된 고용의 양적 및 질적 특성(2010.12)	전봉걸
451	Where to draw lines: stability versus efficiency(2011.1)	Thomas J. Sargent
452	Global economic governance after the crisis: The G2, the G20, and global imbalances(2011.1)	Andrew Walter
453	기업 다이나믹스와 경제성장: 기업 간 이질성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2011.1)	김정욱, 전현배, 하준경
454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국가별 보물효과 분석을 중심으로(2011.1)	오완근
455	Optimal Implementable Monetary Policy in a DSGE Model with a Financial Sector(2011.1)	이우현
456	Monetary Policy of the Bank of Korea during the First Sixty Years(2011.2)	이재우, 김경수
457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정보의 생산과 공유(2011.2)	이인호
458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2011.2)	김준경
459	인구 고령화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노동공급 및 연금제도를 중심으로(2011.2)	김태정
460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2011.3)	정선영
461	구조적 VAR 모형 및 세율자료를 이용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2011.4)	김배근
462	Limits to Arbitrage in the Swap and Bond Markets: the Case of Korea(2011.5)	박하일
463	시스템리스크와 금융규제(2011.5)	이승환
464	경제의 대외개방도 증가가 숙련 및 비숙련 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2011.7)	김영준
465	국제금융시스템의 미래(Futur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 2011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2011.8)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466	SVAR(structural VAR)를 이용한 거시·금융 기간구조(Macro-finance term structure) 모형 분석(2011.8)	윤재호

467	우리나라 사업서비스업의 생산성 결정요인	정선영
468	동아시아의 금융통합 · 협력: 평가 및 시사점	장홍범
469	The Experience Premium	Hyeok Jeong · Yong Kim · Iouri Manovskii
470	한국의 經濟成長과 社會指標의 변화	조윤제 · 박창귀 · 강종구

* 금융경제연구 제1~200호의 발간목록은 제320호 이전 책자를, 제201~300호의 발간목록은 제421호 이전 책자를 참고하십시오.